

문재인 정부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8. 17 (목) 10: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제발표

1. 한미·한중·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
2. 문재인정부의 대북관계와 국방정책 / 이무성 명지대 교수
3. 국가안보와 THAAD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토론자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 조영기 고려대 교수 / 제성호 중앙대 교수

주 최 경대수 · 김학용 · 원유철 · 윤영석 · 이종명 · 정진석 국회의원,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
(가나다 순)

목 차

주제발표

한미·한중·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 춘 근 (이화여대 겸임교수).....5

문재인정부의 대북관계와 국방정책

이 무 성 (명지대 교수).....27

국가안보와 THAAD

유 동 열 (자유민주연구원장).....35

토론문

외교통일국방 정책 토론문


김 석 우 (전 통일원 차관).....49

문재인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와 향후 과제

조 영 기 (고려대 교수).....55

한미·한중·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 춘 근
이화여대 겸임교수




한미, 한중,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

2017.8.17

이춘근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현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 진단

1. 문제의 원천: 북한의 지속적인 핵 도발
2. 북한 핵의 미국 본토 타격 가능 상황을 결코 용인 할 수 없다는 미국의 무력이라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 할 태세
3.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궁극적으로 지지하는 원칙 아래 미국과 협력 혹은 갈등을 전개. (북한과는 혈맹, 원유차단 불가론)
4. 일본은 적극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협조하고 있으며 심지어 군사적 지원까지도 공언하고 있다. (국방상의 북한 미사일 요격 언급 (8월 10일))
5. 한국의 올바른 입장(대외 외교 및 안보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문제의 원천: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되가는 상황.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을 Red Line 으로 설정

북한은 2016년 2월 7일 이 미사일을 마지막으로 발사했다.

당시 장거리 미사일의 부품이 중국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2.14. Washington Post)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문제의 원천

구분	1차 (1 번 궤도)	2차 (2 번 궤도)	3 차	4차	5차
일시	06,10.9	09,5.25	'13.2.12.	16,1.6	16,9.9
위력	1Kt - 3.9Mb	수 Kt 4.5Mb	6-7Kt 4.9Mb	약 6Kt 4.8 Mb	약10Kt 5.0Mb

각종 미사일 약 1,000 기 보유
김정은 집권 기간 (5년) 53발 발사 (2017.5.20.현재)

2016년 4월 부터 10월: 무수단 8 차례 발사

2017년 2월 12일 2단 형 고체추진 미사일 (트럼프 취임 21일만에)

3월 6일 개량형 Scud-er 4발 발사

3월 22일 원산 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 (직후 폭발)

4월 5일 신포 탄도 미사일 발사, 동해 60 Km

4월 16일 중거리 미사일 발사 4-5초 후 폭발

4월 28일 미사일 발사, 실패

5월 14일 미사일 발사, 성공(문재인 대통령 취임 3일만에)

5월 21일, 27일 미사일 발사, 성공

5월 29일 스쿠드 미사일 발사 + 6월 8일 지대함 미사일 발사

7 월 4일 : ICBM 발사.

7 월 28일 : ICBM 발사. (8월 위기의 본질적 원인)



주체적 핵 강국 건설사 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12》형 시험발사 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형의 로켓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 하시였다. **자손만대에 물려 줄 '주체 탄'**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원대한 핵 강국 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세계가 보란 듯이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해 나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로 되지 않을 것이며 ... 미국은 그 기회에 조선의 탄도 로켓 들이 미국에 실지로 위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속 시원히 보면 될 것이라고 말씀 하시였다. 2017년 5월 14일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 후 (평양 5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7월 4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김정은 2017.7.10.

This image made from undated video of a news bulletin aired by North Korea's KRT on July 10, 2017, North Korea's leader Kim Jong Un waves to the audience in Pyongyang. Kim attended a concert replete with pop music and thunderous applause to fete the successful launch of his country's first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ndependent journalists were not given access to cover the event depicted in this photo.

5



NBC "트럼프 명령 떨어지면 B-1B 폭격기로 北 미사일기지 선제타격 작전 마련"

최락선 기자
2017.08.10 14:36 (chosun.com)

북한이 미국을 더 위협하면, 북한은 전 세계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다."

Trump stunned critics and supporters at home and abroad Tuesday when he vowed to attack the North with a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matching a bellicose rhetoric usually made exclusively by Pyongyang. (Trump. 2017.8.8)



6



LOCKED and LOADED

August. 11.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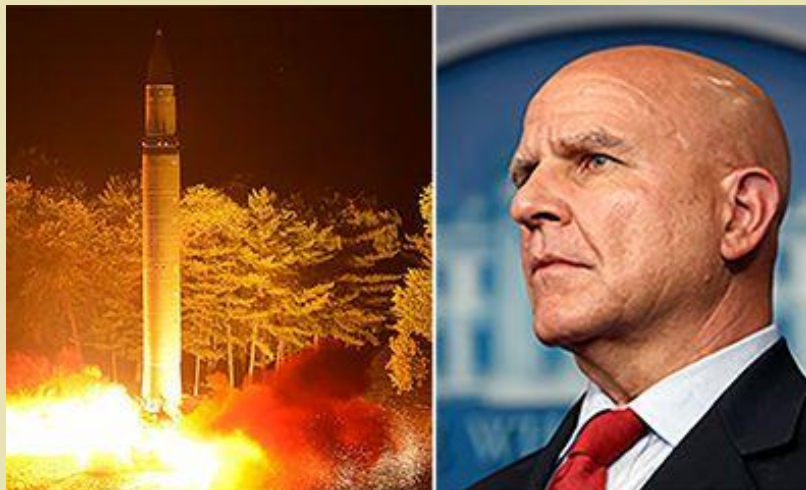
북한 핵·미사일 관련 미·북 공방

- 7일 "미국이 극악한 범죄 대가를 전백 배로 받게 될 것. 최후 수단도 불사." **북한 정부 성명**
- 8일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성공." **워싱턴포스트**
- 8일 "북한은 전 세계가 본 적 없는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 9일 "화성-12형으로 꺾 주변에 포위 사격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 검토." **북한군 전략군 대변인 성명**
- 9일 "북한은 정권의 종말과 국민의 파멸을 이끌 행동 중단해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 10일 "8월 중순까지 꺾 포위 사격 방안 최종 완성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명령 기다릴 것." **김락겸 북한 전략군 사령관**
- 10일 "(화염과 분노 발언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던 것 같다. 생각지 못한 일이 북한에 일어날 것." **트럼프 미 대통령**



'ROGUE, BRUTAL REGIME'

McMaster: N. Korea nuclear strike threat is 'impossible to overstate' Fox News 2017.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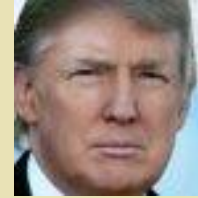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북한 핵으로 인한 위기
NK crisis= Cuban Missile Crisis in Slow Motion
- Robert Littwak**



Donald J. Trump Verified account @realDonaldTrump ·
16h16 hours 4:29 AM - 11 Aug 2017

Military solutions are now fully in place,locked and loaded,should North Korea act unwisely. Hopefully Kim Jong Un will find another path!

52,151 retweets 146,997 likes
(2017.8.12.12:09 한국시간)



북한이 비 이성적으로 행동할 경우에 대비,
군사적인 해결책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기 희망한다.

평화적 해결을 누구보다도 원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8월 11일 National Security Briefing in Bedminster NJ
2017.8.11.

9



A view shows a Pyongyang city mass rally at Kim Il Sung Square, Aug. 9, 2017, to fully support the state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government in this photo released Aug. 10, 2017, by North Korea's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in Pyongyang.

North Korea is dismissing U.S. President Donald Trump's stark warnings to launch military action against the socialist regime if it continues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북한 Guam 에 대한 미사일 4 발 발사 위협

10



Japan ready to protect Guam, defense minister says. [Fox news 8.10.](#)

In the event of a North Korean nuclear attack on Guam, Japan's new defense minister said Thursday that his country's military could shoot down the missiles before they reach the U.S. territory.

In such a scenario, Japan has the right to activate its Aegis destroyer missile defense system, Defense Minister Itsunori Onodera said during a session of the National Diet, Japan's parliament.

Japan ready to protect Guam, defense minister says. "일본, 북이 Guam 으로 미사일 발사 시 요격 할 것임"

By Lukas Mikelionis Published August 10, 2017 Fox New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8월7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대변인/ 한국 청와대]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 하에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양국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사국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북 핵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언급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협조해 전례 없이 강력한 결의안 채택을 이뤄냈다고 말하고 이번 결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두 번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미국이 다양한 무력시위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월3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 취임 후 가장 빨리 미국을 방문 한 기록을 남겼다. (박근혜 71일, 이명박 54일, 노무현 79일. 문재인 50일)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확장 억제력을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 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2017.6.30. 한미정상 회담 공동 언론 발표문 (문 대통령)



North Korea after Kim

Jong Il. 김정은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한다. 최악의 나라의 정권 교체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단지 정권교체를 희망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 Dec 31st 2011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을 **“제거 해야”** 할 정권으로 인식한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But the Kims cannot survive for ever. The sooner a dialogue begins about how to replace them, the better—not just for the stability of the region, but also for North Korea’s forgotten and downtrodden people.

“김정은이 영원히 생존할 수는 없다. 어떻게 그를 교체 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는 -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뿐 만 아니라 북한의 잊혀진 그리고 처절하게 살고 있는 인민들을 위해-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The Economist 2011.12.31.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략: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통일 대 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국제정치학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게 기초한 북한의 핵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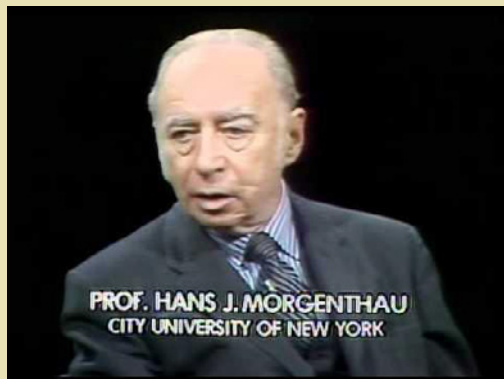
15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Henry A. Kissinger,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

북한의 핵전략은 기초 수준의 핵 전략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1.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
2. 미리 항복을 하는 것.”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16



“Obviously, North Korea is a big, big problem and we will deal with that very strongly.”

2월 12일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
2월 13일 캐나다 수상과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에 대해 **아주 큰 문제이며
매우 강하게 대처할 것** 이라고 언급

17



SEOUL, South Korea — The U.S. military is deploying a new **Gray Eagle attack drone system** in South Korea as it moves to bolster capabilities against a growing threat from the North.

A **Gray Eagle** Unmanned Aerial Systems company will be **permanently stationed at Kunsan Air Base**, south of Seoul, U.S. Forces Korea said Monday.

“In case of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manned aircraft could infiltrate into the skies of North Korea and **make a precision strike on the war command and other major military facilities,**” the official told Yonh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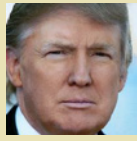
It is capable of carrying four Hellfire air-to-surface missiles, according to the company’s website.

[Stars and Stripes 2017.3.13.](#)

18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North Korea is behaving very badly. They have been "playing" the United States for years. China has done little to help!

오전 6:07 - 2017년 3월 17일

북한은 대단히 나쁘게 행동 하고 있다. 그들은 수 년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중국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4월 5일 북한 미사일 발사 후 킬러슨 국무장관은:

The United States has spoken enough about North Korea. We have no further comment. <https://go.usa.gov/xXnXN>

10:13 AM - 5 Apr 2017

19



Fox News Insider
April.17. 2017.

Retired General Jack Keane said **China has the option to assassinat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n order to halt the country's intercontinental nuclear threat.**

Keane clarified that the possibility of such a move is very remote and the subject is likely too taboo to discuss diplomatically with other concerned nations.

But, he said that if Kim was killed, it could result in a military or other type of coup that could produce a better leader.

The 35-year-old Kim is the third in his family to serve as the country's leader.

His father Kim Jong-il from 1994 to 2011 and was preceded by Kim Il-sung, an ally of the former Soviet Union.

20



Donald J. Trump 인증된 계정 @realDonaldTrump · 7월 5일

Trad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grew almost 40% in the first quarter. So much for China working with us - but we had to give it a try!

Donald J. Trump인증된 계정 @realDonaldTrump 7월 4일 더 보기
...and Japan will put up with this much longer. Perhaps China will put a heavy move on North Korea and end this nonsense once and for all!

Donald J. Trump인증된 계정 @realDonaldTrump 7월 4일 더 보기
트윗 링크 복사하기
트윗 답아가기

North Korea has just launched another missile. Does this guy have anything better to do with his life? Hard to believe that South Korea.....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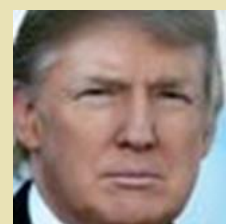
Donald J. Trump Verified account @realDonaldTrump · Jul 29

...they do NOTHING for us with North Korea, just talk. We will no longer allow this to continue. China could easily solve this problem!

28,534 replies 22,261 retweets 88,281

Donald J. Trump Verified account @realDonaldTrump · Jul 29

I am very disappointed in China. Our foolish past leaders have allowed them to make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 year in trade, yet...



22

Perry: Don't rely on China to solve North Korea

Amanpour **2017.4.16 CNN**

"It's time not to look to China to solve this problem," says Former U.S. Defense Secretary William J. Perry, who was in office when a deal with North Korea was last struck.



23

차오스궁(曹世功) 아태학회 한반도연구회 위원은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에 기고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글에서

"최근 중국 내에서 북한 붕괴론을 넘어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정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발상은 중국과 북한의 우호 관계 발전 역사와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북한 포기론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차오 위원은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면 양국은 우호 관계에서 적대관계로 변하게 되고, 서로 우호적인 이웃 국가와 안전한 국경을 잃게 된다"며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전략의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전략적 완충지'로서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북한을 제재 하더라도 절대 북한을 포기하거나 북한이 붕괴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모택동의
唇亡齒寒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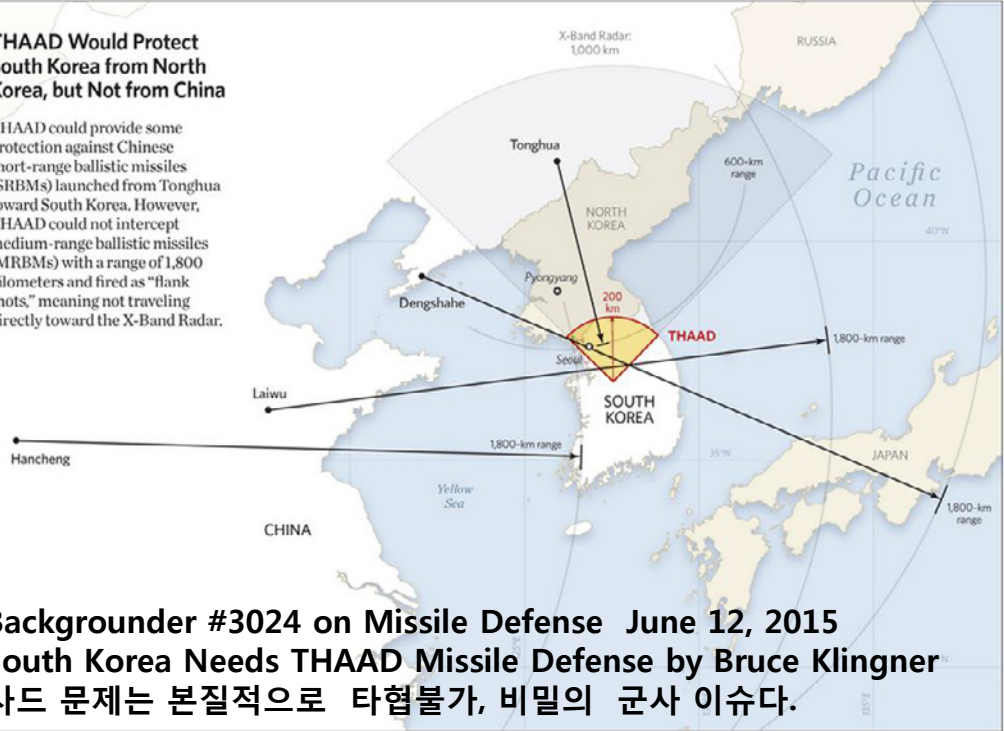
24



MAP 3

THAAD Would Protect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but Not from China

THAAD could provide some protection against Chines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SRBMs) launched from Tonghua toward South Korea. However, THAAD could not intercept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s (MRBMs) with a range of 1,800 kilometers and fired as "flank shots," meaning not traveling directly toward the X-Band Radar.



Backgrounder #3024 on Missile Defense June 12, 2015
South Korea Needs THAAD Missile Defense by Bruce Klingner
 사드 문제는 본질적으로 타협불가, 비밀의 군사 이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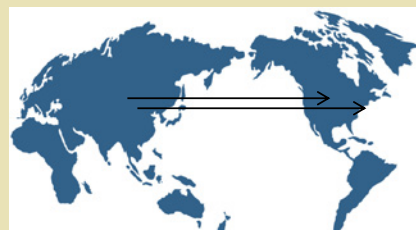
Source: Heritage Foundation research.

BG 3024 heritage.org

타협 가능한 공개적 외교 문제가 아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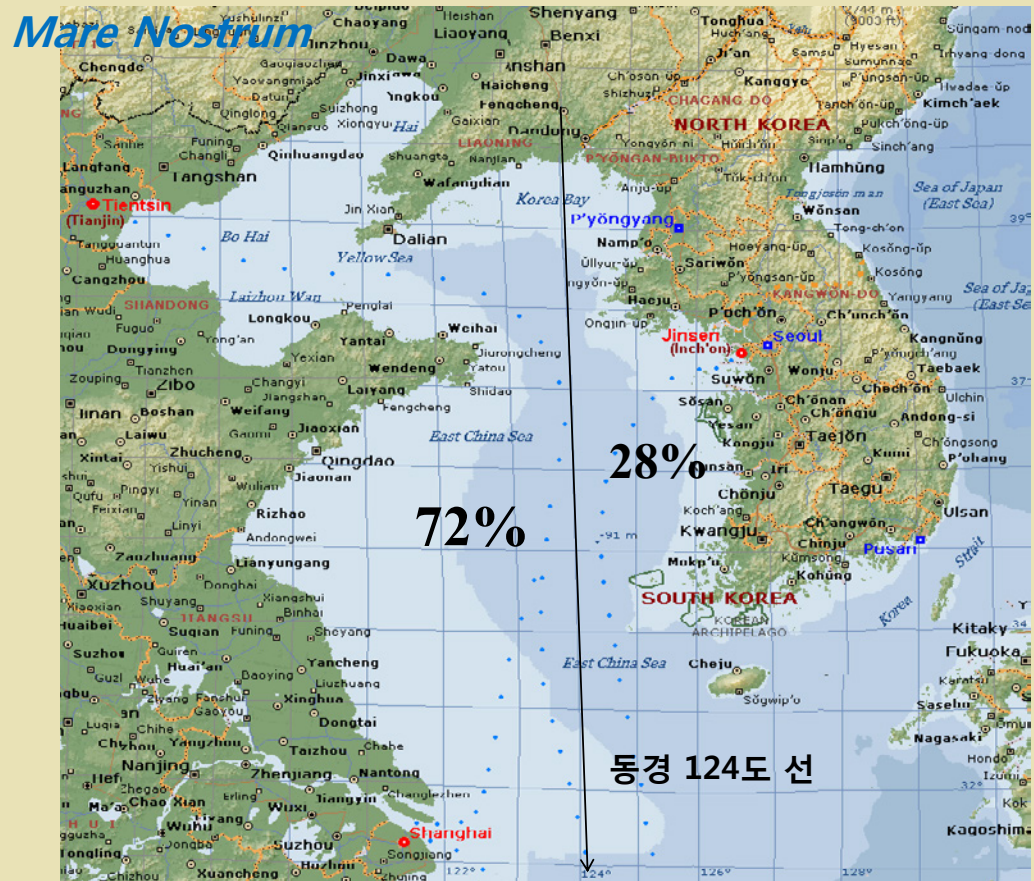
한국은 7월 8일 THAAD 배치 결정 발표



중국이 미국을 향해 쏘는 ICBM은 만주상공을 날지 않는다. 즉 미국의 THAAD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궤적과 관계가 없다.

지구는 평면이 아니다. **THAAD**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의 일환이다. 그런데 그걸 반대하나?

Chinese want to make the Yellow Sea as their *Mare Nostrum*



27

미국과 중국 국력의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정치는 싫던 종던 **Power Politics** 일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앞으로 최소 50년 이상, 혹은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충돌과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통일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이준근 지음

21세기에도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이자 한국의 동맹국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김앤김북스

2016.5.27. 김 앤 김 북 스

28



한반도의 지정학: 한국은 국제정치에 의해 운명이 규정되는 나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분단을 극복하면 **통일 강대국도 가능할 것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요충에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는 세계 1-4위의 강대국이 모두 모여 있다. 해양 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장, 냉전의 첨단지역으로 국제정치의 핵심지역이었다.

통일된 한반도는 우리의 꿈이다.

그러나 통일된 한반도가 해양세력이라면 중국이 용납하지 않는다. 반대로 통일한국이 대륙세력이라면 일본이 허락하지 않는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망치, 심장을 겨누는 단도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의 패권 유지를 국가 대 전략 목표로 삼고 있는 나라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 역시 미국의 국가 대 전략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를 **Linchpin** 이라 생각할 정도로 중시 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과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한반도 통일은 통일을 원하는 세력의 힘이 반대하는 세력의 힘을 능가할 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교훈: 독일로부터 배운다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이루어낸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가지로 요약할 것이다.

미국의 지원과 서독의 경제력, 그리고 서독인의 단결력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원 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 된다. 우리가 진실로 통일을 원한다면 이 세가지 요인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 박성조, 한반도 붕괴:위기의 남북관계 그 새로운 전략과 해법 (서울: 랜덤하우스 중앙, 2006), p. 12.



미국의 세계 대 전략



미국은 중국의 전략적 도전에 이미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인도, 베트남과의 탁월한 우호관계, 몽고와의 우호 관계를 돈독히 다지고 있다. 2012. 1월 미국은 미얀마와 외교 재개. 필리핀과의 동맹 대폭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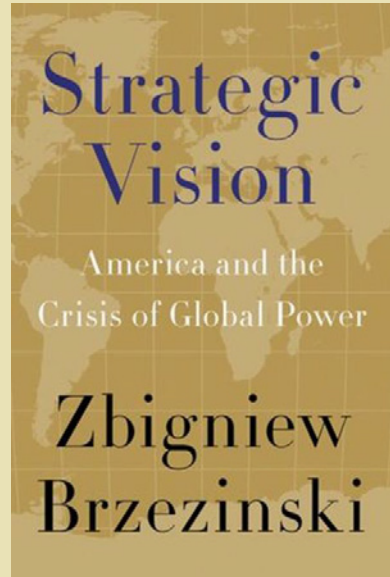


—올해(2012) 초 펴낸 저서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에서 미국의 쇠퇴로 한국에게 힘든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신이 한국 정부의 안보자문을 맡고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겠나.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지면 한국은 3가지 옵션 가운데 고민스러운 선택을 해야 한다.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든지, 독자적 핵무장을 하든지,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 옵션이 가장 낫다고 본다.**

한일 협력이 미국에 가장 덜 위협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지할 것이며 동북아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은 역사적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

동아일보 2012.8.7.



1928 폴란드 바르샤바 출생
1953 미국 하버드대 박사
1977~81 지미 카터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
Johns Hopkins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교수
2017년 작고.

33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추상적인 외교적 수사학을 되풀이하다가 난데없이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안하여 **한국의 정치적 지축을 흔들어댄다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체제 손상 및 궁극적 붕괴를 추구해온 북한의 정책을 성공시켜 주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전략적 행위에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은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동맹국 미국의 대체 국이 될 수 없다.**

세계 외교사에서 빛나는 최고의 전략가 비스마르크는 5대 강대국 사이에선 항상 '3의 모임'에 속하는 것이 낫다고 충언했다. **한국의 미래는 나 홀로 야망에 들뜬 중국이 아니라 유럽 및 일본과 동맹을 맺어 '3'을 이루는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토대 위에서 한국의 모든 대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외교 전략이 군사적 동맹의 국가 방위 전략과 크게 엇나간다면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라 자멸(自滅)의 길을 택하는 셈이 될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중국이 불췌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안해 올 경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대답할 준비를 미리 치밀하게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강성학 고려대 명예교수

2014. 12.3.
조선일보 기고문

34



한·중 수교가 만 23년을 맞았다. 대(對) 중국 교역량은 미국을 넘어섰다. 일각에선 한·중 관계 비중을 한·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진부한 얘기 같은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미국을 대신할 수 없다. 앞으로 상당 기간 변함이 없을 거다. 중국과 일본으로서도 제일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다. 우리 내부에서 자꾸 한·중 관계를 말하는데 중국은 우리와 역사적 관계도 오래됐고 문화적 공유점도 많지만 이념 등 다른 점이 아직 많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중국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고 어떤 경우에도 중립을 지키려 한다. 한·중 관계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6년5개월 최 장수 대사 김하중 前 통일부 장관. 2015.03.14 조선일보



이상과 같을 진대 혹시 한국은 (여야 불문하고)

미국에는 사무적

중국에는 굴종적

일본에는 적대적

대외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李春根

연세대학교 정외과, 동 대학원졸업,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졸업(정치학박사)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역사학 박사과정 수료

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이사

이화여대 경영대학 겸임교수/국방부 자문위원

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자유 기업원 부원장, 서울대, 연대 고대 강사

캐나다 The University of Victoria 교수

한국 국제정치학회 부회장

저,역서: 북한 핵의 문제 (著 1995)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譯, 2004)

새로운 제국 중국(譯, 2005)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著, 2007.1.8)

21세기 국제자원쟁탈전(譯, 2008.12)

군인과 국가 (公譯 2010)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의 대응(공저 2011)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저, 2012)

미국에 당당했던 한국의 대통령들(저, 2012)

미 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저,2012)

격랑의 바다: 아시아 국가들의 해양전략(역,2014)

정치의 자본주의 비틀기 (역, 2016)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 국가 전략(저, 2016)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개정판, 역. 2017)

등 총 20 권 저서 및 역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17일 자유한국당 세미나 발표 자료 준비된 것입니다. 본 강의에 인용된 자료는 모두 공개된 자료(학술서적, 신문, 방송 뉴스, 논문, 잡지 및 internet source 들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2017년 8월 13 일 pm 최종 수정) <http://blog.naver.com/choonkunlee> (이춘근 blog : 강의 내용 관련 본인의 글들이 게재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북관계와 국방정책

이 무 성
명지대 교수

문재인정부의 대북관계와 국방정책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무성

1

딜레마적 현실

- 딜레마: 현실 반영인가? 현실 직시 실패인가?
 - 국제정치의 수인의 딜레마 현실
 - 이상적 현실관에 따른 왜곡된 현실 분석
 - 전통적 안보딜레마 (security dilemma)
 - 존재론적 안보딜레마 (ontological security dilemma)
- 대화와 개입의 딜레마
 - 방법론: 경제적 협력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 6자 회담과 같은 다자주의 틀 속에 대화
 - 인도적 지원
- 미중 간의 균형자(balancer) 역할의 딜레마
 -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
 - 북한 정권의 개입 및 압박
 - 상기의 양면정책을 통한 북한 핵문제 접근

2

7.6 베를린 선언

- 5대 주요 내용
 - 6.15선언 10,4 정상선언 이행
 - 북한체제 보장하는 비핵화 추진
 - 남북평화체제구축
 - 한반도 "신경제지도" 본격화
 - 비정치적 분야 교류 확대
- 4가지 추가 제안
 - 이산가족상봉 재개
 - 평창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
 -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
 - 남북대화 재개
- 대화와 개입을 위한 기본 틀
 - 의의와 한계점 공존

3

의의

- 군사적 충돌에 의한 남북한 통일보다는 대화와 개입 방식 선호
 - 국제 정치의 "Normative" (규범적) 논의 수용
 - 탈냉전, 탈국가주의 국제질서 (Post-Westphalian World Order)하에 논의되는 주요 담론 수용
 - 적합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 반영
- 인도적 지원과 인권 정치 분리(decoupling approach)
 - 인도적 지원의 비정치화(apoliticization)의 의의
 - 인권정치: 북한 국가 체제(authoritarian regime)의 부산물: 적극적 대응할 필요 있음: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문제로 접근

4

한계점

- 또 다른 선언
 - 대화의 개입은 장기적이고 구체적 road-map이 필요함
 - 한국의 경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연속성이 훼손되는데 베를린 선언의 이행 가능성 의문시
-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차별화 미비
 - 사회적 학습을 통해 단기적 차원의 대북 개입 및 대화 정책에 대한 효과 미미
 - 북한으로부터 복잡한 형태의 사회적 학습 (complex social learning effect)를 끌어내기 어려움: 단순 사회적 학습효과 (simple social learning) 만 목도
-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론적 논란(epistemological debates) 잔존
 - 남북 관계 여러 현안을 인과관계(causal relations)
 - 또는 구성적 관계 (constitutive relations) 에 논의 불충분
 - 지역협력과 다자주의 차별성 인식 필요

5

북핵과 대응

- 북핵문제
 - ICBM 완성 단계
 - Delivery system의 중요성
 - 효율적인 억제효과(deterrence effect) 기대: 손익계산
 - 존재론적 안보 진작행위(ontological-security-seeking activities)
 - 주체 사상과 선군 정치 기치하의 national branding의 일환
 - 북핵 포기 불가능
- 정권생존이 목적(ends)이 아닌 수단(means)임
 - 생존(survival)에 문제시되는 physical threat이 있나?
 - 안보담화행위 (security speech act): "불바다" 공방, 정치적 네러티브 (narratives)
 - 자아선포적 역할(self-proclaimed role)에 충실
- 전술핵 배치
 - 대칭적 협상파트너 자리매김한 것 중요
 - 야당 주장, 여당 일부에서도 논의 시작
 - 대화의 틀의 형태: 양자주의 또는 다자주의?

6

사드문제

- 정치문제화 (Politicization)
 - 국내정치 세력 (진보 세력의 세력화의 일환)
 - 주변 강대국의 세력 (중미 간 지역 패권 경쟁: Asia-Pivot vs. 일대일로 등)
- 문재의 정부의 입장 또는 정체성 (ontological self)에 귀결
 - 과거 정부와 차별화 (othering process from the past self)
 -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담론적 행동일 뿐 (discursive practices of self-identity construction)
- 연미화중 가능한 가?
 - 군사안보 문제는 자아(self)와 타자(others)를 구분 함
 - 균형자 역할: 약소국(안보 분야)의 희망 (wishful thinking)?
 - 미, 중 간 패권 경쟁: Rebalancing: Power Competition 또는 Identity Competition
 - 우리의 입장 안보: 단기적 한미안보 중시; 장기적?

7

경제협력 및 정치 협력의 장기적 전망

- 경협을 통한 정치적 공존의 장기적 전망
 - 개성 공단 재개 등이 방법론적 제안
 -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의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s)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의 결과
- 파급효과 최대화에 필요한 전제조건 미 충족
 - 파급효과가 저위정치 (low politics)에서 고위정치(high politics)로 반드시 발생하지 않음
 - 정치, 경제 및 사회 체제의 양립성 (compatibility) 의문
 - 예, 사회주의 대 자유주의; 시장경제 대 계획경제; 시민사회 활동 대 원천 금지 등
 -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차이점 고려: 독일의 경우와 다름 (화해 분위기 조성: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음)
- 경제협력에서 정치협력에 이르는 여정에 대한 이해부족
 - 경제협력 (economic cooperation)과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은 다름
 - 전자와 후자가 정치 협력에 미치는 함의는 다름
- 원론적 차원에서 "적합성"을 가지나, 현재의 갈등 상황에서는 의문시 됨

8

결론

- 규범적 논의
 - 자기 정체성 진작 노력 필요
 - 원칙 및 명분의 확산 (자유주의, 시장경제 등)
- 실리적 접근법
 - 한미동맹 강화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 본격화 필요
- 정치적 제도화(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에 경주
 - 대칭적 군사력에 기반한 대화에 필요한 제도적 틀 확립
 - 예, 남북 및 이해 당사자 간 다자주의 및 양자주의 대화 및 개입 (incentives와 sanctions) 병행
 - 한반도 주변 4강뿐만 아니라 EU 같은 honest broker의 참여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 근원적 논의 필요
 - 목적과 방법론적 세례화에 대한 논의 필요
 - 통일 및 한반도 평화 구축: 국가주의적 존재론적 입장(statist ontology) 또는 ?

국가안보와 THAAD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국가안보와 사드(THADD)

유 동 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I. 머리말: 국가안보 위협요인 증폭

II. 사드 배치의 긴급성과 방해요인

1. 사드 개관
2. 사드 배치의 긴급성
3. 사드 배치의 방해요인

III. 우리의 대응방안

부록1: 사드배치 관련 북한의 대남선동 사례

부록2: 중국의 사드 패악질 규탄 성명

I. 머리말: 국가안보 위협요인의 증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되었다. 지난 대통령선거 시 문 후보의 안보관련 공약이나 발언을 보면 타 후보에 비해 상당히 북한에 우호적이었다. 문 후보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평양에 가겠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겠다”, “사드배치는 재검토하고 국회비준을 통해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국정원을 정치댓글, 정치사찰기관으로 규정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경찰이관, 국정원 해체와 해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편, (한미연합사 해체로 귀결될)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남북경협(실제로는 일방적 대북지원) 추진, 국가보안법 개정 등의 공약들을 내세운바 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내내 이들 공약을 실천에 옮기는 작업에 진력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와 관련한 문정부의 정책수행은 전쟁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대공수사

를 무력화시키는 등 우리의 안보대응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이다.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내용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00일 동안 총 7차례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응답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7월 6일 독일 쾰른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언급하며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정전협정기념일(7월 27일) 이후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대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7월 17일에는 남북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등을 북한에 제안(실제는 대화구결?) 했지만, 돌아 온 것은 ICBM급인 화성 14형 2호 발사 실험과 ‘서울불바다’ 협박이었다.

UN 등 국제사회가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를 하고 있는데도, 문 정부는 이에 역행하여 나홀로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위협이 증폭되는데도 문 정부가 반문명적인 수령절대주의 폭압 체제인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외면하고 아직도 대화 운운하며 기약없는 ‘대북 짝사랑’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정부의 안보정책에서 가장 비판받아야 사안 중 하나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정책 혼동이다.

문 정부의 사드(THADD)관련 대응이 오락가락하는 갈지자를 연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에도 ‘사드배치 반대→ 사드배치 찬성→ 사드배치 재검토→ 사드배치 국회비준’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갈지자 행보는 국익이나 개인적 소신이 아니라, 철저히 사드배치에 대한 여론의 향방과 당론 사이에서 헤맨 결과이다.

대통령에 당선 된 이후에도 전 정부에서 결정, 배치된 사드를 사드반입 보고누락, 사드부지의 환경영향 평가 등을 제기하며 판지를 걸고 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사드배치 철회는 없다”라며 “절차적 문제를 해결한 후 배치하겠다”는 등의 기회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지난 7월 2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예상되는데도 적법절차 운운하여 1년 이상이 소요될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결정 발표했다가, 북한이 화성14형 2호 시험을 발사를 단행하자 심야에 사드 즉시 배치로 돌아섰다. 그러나 ‘사드 즉시 배치’를 선언하고도 20일이 지난 현재까지 사드 추가배치

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중대한 국가안보 직무유기이자 자해행위이다.

이에 본 발제문에서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드배치의 긴급성을 제기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II. 사드배치의 긴급성

1. 사드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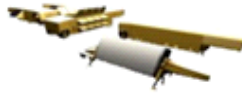
사드(THAAD)란 무엇인가?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미국의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 사거리 3,000km급 이하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어 내려올 때 40~150km 높이에서 직접 맞춰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포대 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

사드(THAAD) 1개 포대

- 1개 포대비용: 1.5조 - 2조원
- 미사일 1발당: 120 - 150억원

2. 사드 배치의 긴급성

현재 북한은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1,000여 발의 탄도 미사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보유한 현 미사일 방어체제로는 방어가 불가하다. 사드는 현재 군이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엇 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대한민국의 1/2~2/3)을 방어하고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지난 7월 11일에 이어 7월 30일에도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실시한 요격 시험이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로써 사드는 이번까지 총 15차례 요격 시험에서 모두 100% 성공했다. 특히 이들 시험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으로 실시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IRBM과 MRBM를 요격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처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배치는 현존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이다. (물론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과 체류 미국인의 생명도 지킬 것이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며, 비타협적인 군사모험주의노선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

사드의 한국배치는 국가안보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이다. 한가롭게 남의 나라 일인 양 사드배치 문제를 가지고 좌고우면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3. 사드 배치의 방해요인

사드의 한국배치를 방해하는 공개적인 세력은 ① 북한 ② 중북세력 ③ 중국과 러시아 등이다. 그러나 가장 큰 방해요인은 문제인 정부의 모호한 안보관과 국가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로 “《싸드》의 남조선배치는 남녘땅을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실현을 위한 전초기지, 군사기지로 내맡김으로써 조선반도를 대국들의 핵전쟁마당으로 만들려고 친미보수패당이 감행한 천추에 용납 못할 역적행위이며 그 전 과정이 불법과 기만, 독단과 전횡으로 강행된 박근혜 《정권》의 악폐중의 악폐이다.”(북한 노동신문, 2017.6.20.)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명분이고 북한이 반대하는 실제 이유는 사드가 북한 적화통일의 위력한 군사적 수단인 핵과 탄도미사일공격을 무력화시킬 확실한 무기체제이기 때문이다. 북한 추종세력인 국내 중북세력도 이의 관점에서 사드배치를 극력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배치와 관련하여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안정성(strategic stability)을 해친다는 것이다.
- ②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핵심 군사시설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 ③ 한국이 미·일 중심의 동북아 지역 MD(Missile Defense)체제에 편입되어, 중국이 ICBM 발사 시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배치될 사드(THAAD) 레이더의 탐지거리(유효탐지 600km, 최대 탐지 1,000km)나 요격 고도(45-150km)로 볼 때, 중국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즉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비행경로는 사드의 탐지범위를 벗어나고, 지상 1,000km로 추진하는 ICBM을 한국 내 사드로 요격할 수 없는 것이다.



<출처> 조선일보 그래픽 뉴스

http://thestory.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30/2016013000818.html

중국정부도 한국에 배치될 사드가 직접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막기 위한 것임을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총력 반대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첫째, 한미(군사)동맹을 무력화하여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에 종속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신(新)국방전략의 하나로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채택하며 G2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는 ‘대(對) 중국 헤징(Hedging)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대국굴기(大國(大國崛起),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내세우며 군사 및 외교, 경제역량을 강화하며 미국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사드의 한국배치가 한미동맹(한미군사동맹)의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일환이며 결국 중국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고 보고, 이를 용납치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보유한 가공할만한 핵, ICBM 등 미사일과 지상군, 공군, 해군력을 감안할 때, 사드배치로 중국안보가 위협받는다 인식은 소인배와 같은 처사이다. 또한 앞서 지적했지만 한국배치 사드 레이더의 유효탐지거리나 요격 고도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둘째, 장기적으로 사드배치 저지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중국 패권을 확대하고,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 재편을 기하려는 것이다. 즉 아시아에서의 패권과 세계에서의 패권을 거머쥐겠다는 중국의 ‘신(新)패권주의’ 전략이 도사리고 있다.

부가적으로는 중국의 사드 한국 배치 반대는 ① 혈맹이라는 북한입장을 옹호, 대변하여 중국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전략적 위상인 ‘대미(對美) 전초 방패막’을 강화시켜 줄 것이며 ② 아시아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인시켜주어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③ 국내 친북세력과 친중세력들의 입지를 강화하여 ‘반미-친중(反美-親中) 통일전선’의 확대를 기하려는데 일조할 것이다.

셋째, 중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및 세계평화를 지향한다면, 사드배치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반문명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해체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Ⅲ. 우리의 대응

북한과 중북세력 및 중국이 사드배치를 극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실질적으로 사드배치를 지연시킬 경우,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것이다.**

현실적인 국가안보 위협요인을 눈앞에 두고 북한과 중국 및 국내 중북세력들의 사드배치 반대 공세에 결과적으로 동조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대한 혼돈**이며, 국가안보의 한축이며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의 강력한 억지력(deterrence)인 한미동맹의 중대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위할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해태(懈怠)하는 반안보적 행태**임을 지적한다.

첫째, 정부는 국가안보차원에서 각종 논란종식을 위해 조속히 사드배치를 완료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만약에 핵과 생화학무기를 탑재한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로 발사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거주하는 청와대와 문대통령 친지 집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드로 요격 안하고 손놓고 대통령 자신과 친지가족들이 다 죽기를 바라는가?

둘째,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과 북한 및 중국의 반대공세가 명백함에도 좌고우면 한다면,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주권국가와 주권정권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 및 저지압력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외교적 폭거로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안보주권 수호차원에서 강력하게 중국정부에 대해 내정 불간섭을 경고해야 할 것이다. 사드에 관한 중국의 저의를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 중국도 대한민국의 잠재적 안보위협 국가인 것이며, 우리도 최소한의 방어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드배치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내부에 최근 부각한 친중론자(親中論者)들에게 묻는다. 한국이 북한 및 제3국으로 부터 공격을 받으면 누가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해주는가? 중국인가? 미국인가? 바로 **미국이다.** 한국의 안보위협에도 중국은 우리를 지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외교에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자 철칙이다. 이러한 상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에 ‘급변하는 국제정세’, ‘외교의 다변화’ 운운하며 한미동맹 구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안보장치 무장해제론자이며 결국 반(反) 대한민국세력이다.

넷째, 정부는 **우리 내부의 중국 종속세력(친중론자)과 종북세력 및 이를 비호, 옹호하는 특정 정치세력과 특정 언론들을 고립화시켜 퇴출시켜야 한다.** 자칭 진보적 지식인인양 행세하는 중국 편을 드는 정치인, 전직 각료, 학자, 언론그룹은 종북세력과 함께 ‘**신(新) 매국노 군(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짝퉁 진보세력들이 우리사회에서 활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들의 행위를 추적하여 기록하여 역사적으로 단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반국가적 반안보세력들을 척결할 의지가 있는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유한국당에게 사드배치 문제를 종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행동을 전개할 것을 제언한다.

- ① 8월 내 사드 추가 배치 완료 촉구(성명 발표)
- ② 성주 사드기지 입구의 초법적 불법투쟁관련자 사법처리 촉구
- ③ 사드배치 불법투쟁 방치하는 사법기관(경찰, 검찰)에 대한 직무유기 처벌 촉구
- ④ 사드 추가배치 완료시까지 청와대, 국방부 정문 앞 릴레이 시위 주도
- ⑤ 당 사드특위 주관 「**사드배치 반대 망언록**」 발간, 배포, 역사적 책임과 단죄 표방
- ⑥ 중국의 사드 폐약질(한국관광 압력, 한국상품 불매운동 등)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부록1> 북한의 선동 사례

민족의 재앙거리인 《싸드》 배치를 철회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2017.6.10)

최근 남조선에서는 괴뢰호전광들이 경상북도 성주골프장에 끌어들인 《싸드》 발사대 2기외에 4기를 추가로 반입해놓고도 숨겨온 사실이 폭로되어 사회각계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박근혜역도의 탄핵후 괴뢰군부호전광들이 미국과 작당하여 《싸드》 발사대를 도적고양이처럼 추가반입해놓고도 저들의 범죄행위를 감추려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삭제한 데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조사를 벌리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싸드》 배치저지전국행동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은 《김관진, 한민구를 비롯한 싸드발사대를 추가반입한자들은 역적들이므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단죄하면서 《싸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처벌을 주장해나서고있다.

괴뢰군부패거리들이 《싸드》 추가반입사실을 숨겨보려는것은 《싸드》 배치를 결사반대하는 남조선 민심의 분노와 주변나라들의 반발을 피하고 미국상전의 환심을 얻어 저들의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또 하나의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용납할수 없는 친미역적행위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남조선인민들을 핵전쟁제물로 삼겨마쳐서라도 상전의 사타구니에 붙어 가련한 운명을 건져보려는 박근혜잔당들의 추악한 정체와 흉심이 날낱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싸드배치를 서둘러도 모자라겠는데 오히려 그것을 문제시하는것은 중북좌파들을 도와주는것이다.》, 《안보문제가 정치쟁점화, 론점화되는것을 우려한다.》, 《싸드와 관련해 더이상의 론난을 자초하는것은 백해무익하다.》고 고아대면서 매국행위를 적극 비호두둔해나서고있다.

이것은 괴뢰군부패당이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이나 박근혜의 턱찌끼를 얻어먹던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민족반역의 무리, 친미역적배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현실은 외세에 명줄을 걸고 동족대결에 광분하는 박근혜잔당들을 깨끗이 청산하지 않고서는 《싸드》 배치로 초래될 핵전쟁재앙을 피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더욱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미국이 저들의 불법, 비법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싸드》를 당장 제 땅으로 끌어내갈 대신 오히려 《미국과 거리를 두자는것》 인가고 올리며면서 남조선당국에 《싸드》 배치를 강박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국방성 미사일방위국장을 급파하여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싸드》가 그 무슨 선사품이나 되는듯이 《남조선에 배치하는 싸드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따위의 협박을 서슴지 않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싸드》 배치를 속히 강행하여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패권 전략실현을 다그치고 괴뢰들을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에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정체와 검은 속심을 여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문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기존결정을 바꾸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느니, 《리해해달라.》 느니 하며 상전의 눈치를 보며 구차스럽게 놀아대고있는 남조선당국의 어정쩡한 태도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싸드》의 남조선배치는 남녘땅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실현을 위한 전초기지, 군사기지로 내맡김으로써 조선반도를 대국들의 핵전쟁마당으로 만들려고 친미보수패당이 감행한 천추에 용납 못할 역적행위이며 그 전 과정이 불법과 기만, 독단과 전횡으로 강행된 박근혜 《정권》의 악폐중의 악폐이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이 《싸드배치가 북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결정한것이며 전임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떠들고 있는것은 《싸드》 배치의 기정사실화를 전제로 한것으로서 《싸드》 배치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남조선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며 도전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 각계층이 《당국은 싸드배치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경우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길가봐 우려하고있다.》고 폭로하면서 《싸드》 배치를 전면철회할것을 강하게 요구해나서고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 각계가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는것처럼 《싸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싸드》 배치를 전면무효화하고 이미 끌어들이 우환단지들을 단호히 들어내는것이다.

미국은 친미역적들을 내세워 끌어들이 전쟁괴물 《싸드》를 당장 제땅으로 끌어내야 한다. 미국의 날강도적인 《싸드》 배치압박에 굴복하면 민족의 근본리익과 자신들의 운명을 해치는 비극적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초불혁명의 산물》이라고 자처하고있는 남조선당국은 초불민심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고 친미에 환장하여 민족반역의 치욕스러운 자취만을 남긴 박근혜패당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 각계가 현대판 《을사오적》으로 규탄하고있는 김관진과 한민구를 비롯하여 《싸드》를 끌어들이자들을 당장 극형에 처해야 한다.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초불투쟁의 그 의지, 그 기세로 친미보수패거리들의 매국배족망동을 짓부시고 미국의 침략적인 《싸드》 배치를 철회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발전시키는 THINK TANK



자유민주연구원

Korea Institute of Liberal Democracy

성명서

2017. 3. 9. (목)

자유민주연구원 행정실

Tel) 02-579-5613

Fax) 02-579-5616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폐약(悖惡)행위를 규탄한다!

- 중국의 사드배치 폐약에 동조하는 **국내 정치권의 사대매국행위**를 경고한다 -

1.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의 한국배치는 현존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이다.

1. 방어를 사드체제가 중국의 안보를 어떻게 위협하고, 어떻게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는지, 자유민주연구원은 중국의 안보관련 연구단체와 공개적인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1. 중국의 안보에 아무런 위협도 미치지 않는 사드의 한국배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심지어 한류 및 한국관광 금지 조치, 롯데 영업정지 및 폭력행사 방치 등 **치졸한 폐약(悖惡)행위를 일삼는 중국정부를 규탄한다!**

1. 사안이 이러함에도 중국과 북한의 사드배치 반대에 동조하고 있는 국내 정치세력과 종북세력들의 행동은 **친중(親中)-친북(親北) 사대매국 이적행위**에 다름 아니다.

1. 중국이 폐약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지속한다면, 자유민주연구원은 대한민국 애국진영과 함께 1단계로 △ **중국여행 전면 중지** △ **중국산 물품 불매운동** △ **불법체류 중국인 추방 촉구** 등의 운동을, 2단계로 △ **중국 현지투자 한국기업 철수 촉구 및 중국과의 국교단절 촉구**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1. 중국과의 경제단절로 단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굴복할 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제2, 제3의 폐약질을 당할 것이다.

1. 우리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세계12위의 경제대국이며 자주독립국가인 대한민국

을 정당한 이유없이 모략하고 굴종을 강제하는 국가와 집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맞서 응징할 것을 결의한다.

※ 언론사에 요청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라는 용어사용을 중지하십시오. 보복이란 남에게 받은 해(害)를 되돌려주는 것인데, 우리는 사드배치로 중국에 해를 끼친게 없습니다.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http://www.kild.or.kr>

외교통일국방 정책 토론회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1.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해결은 불가피 :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소형화된 핵폭탄을 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완성한 “폭탄”이 이제 트럼프의 손에서 터지게 되었다. 트럼프는 폭탄을 뒤로 떠넘길 수 없게 되었다.

2. 클린턴 대통령의 어중간한 타협 - 1994년 10월 제네바 핵합의 :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갈루치와 강석주 간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신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합의에 서명하였다. 바로 11월 미국 중간선거 3주전의 일이다. 그 교섭에 이르는 과정에서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 간에는 큰 이견이 있었다. 김영삼은 과거의 핵을 포함해서 철저한 폐기를 실현하도록 주문했고, 클린턴은 과거의 핵에 대해서는 눈감아주면서 앞으로의 핵개발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마무리 지으려 했다. 김일성의 7월 사망 직전 6월에는 미국의 선제타격설이 퍼졌다. 그럴 경우 북한 장사정포에 의해 서울 시민 백만 명이 희생된다고 Gary Luck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증언하였다. 김영삼은 깜짝 놀라서 선제타격에 반대하였고, 그 대신 갈루치-강석주간의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핵포기의 대가로 지어주기로 한 금포-신호 200만 Kw 경수로원자력발전소 건설경비 45억불 중 7할을 토 한마디 못 달고 부담하게 되었다.

미국의 북핵 선제타격설은 실제 계획이 아니었다고 페리 전 국방장관도 인정하였다. 만약 실제 계획이었다면 극비리에 클린턴의 특사가 김영삼에게 타진했어야 맞다. 정종욱 외교안보수석이 주한미군가족 소개훈련 안내문을 시중에서 전해 듣고 논의가 시작되었다면 실제 계획일 수 없다. 제네바 핵합의에 대한 김영삼의 반대를 차단하고, 오히려 소요경비의 7할을 부담시키려는 블러핑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당시 김정일이 이미 완벽하게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북한경제는 정말 허약했고, 영변 핵개발 상황도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클린턴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북한의 속임수와 타협해서 마치 큰 성과를 얻은 것처럼 포장했다. ‘폭탄’을 다음으로 넘긴 셈이다. 그 폭탄은 클린턴에서 부시, 부시에서 오바마,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계속 넘겨진 것이다. 그동안 터지지 않았던 폭탄이 이제는 크럼프의 임기 중 터지게 되었다.

3. IMF금융위기와 김대중 좌파 정권 탄생 :

당장의 어려운 교섭을 쉽게 마무리하려는 클린턴은 김영삼과 심하게 의견충돌을 하였다. 전화할 때마다 한 시간씩 다투었다. 그 응어리가 1997년 11월 한국의 IMF금융위기로 터졌다. 12월 18일 대통령선거 1개월 전에 김영삼 정부는 두 손을 들었다. 그 정권의 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당시 한국의 엄낙용 재무부 차관보가 일본 대장성의 사카키바라 재무관을 방문하여 30억 달러 자금 스와핑에 합의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결국 불발로 끝났다. 곧바로 한국은 IMF긴축 처방전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에 클린턴은 환호하였다. 좌파정권이면 어떠냐, 친미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었다. 한국사정을 잘 아는 외교관이 적절히 설명했다. “우방국 한국의 대통령들이 미국대통령을 괴롭히지 않은 예가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 직전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해서 잠자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깜짝 놀라게 한 이래 우파 대통령 모두가 미국대통령을 괴롭혔다. 단지, 미국대통령이 감사해 하는 예외는 1965년 베트남 파병 결정이었다.” 김영삼에 대한 클린턴의 감정을 나타낸 것이다.

클린턴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환호하던 가운데 한국사회에서 반미운동이 급격히 확산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없었다. 김대중 지지세력이 반미세력과 같은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2년 정도 지나서였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전후해서는 회담 성사를 위해 5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송금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반미운동이 북한이 주창하는 “우리민족끼리”와 궤를 같이 한다는 심증들이 굳어졌다. 김대중-부시 정상회담, 노무현-부시 정상회담에서 일어난 대북정책관련 갈등과 알력은 햇볕정책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미국의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는 증발되었다고 본다.

지금 문제되는 북한 핵개발에 관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그러한 발언을 했던 좌파 인사들은 과오에 대해 일언반구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4. 문재인 정부의 반미정서와 한미간 신뢰관계 증발 :

미순이-효순이 사건, 전시작전권 전환 촉구, 대규모 대북지원, 광우병 쇠고기 사태 등 일련의 사태는 햇볕정책 시기의 한미 관계에 불신을 조성하기에 충분하였다. 북한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 협력에서 미국은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외교적으로는 양국 간 주요의제, 특히 북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인식과 대책에 관하여 무난하게 의견조정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공약도 북한의 무모한 도발자세 때문에 일단 접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하여도 강한 비난을 하였다.

그러나 싸드 배치에 대해서 결단을 주저하고, 북한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은 계속되었다. 작금의 엄중한 상황 하에서도 비현실적인 대화제의를 계속함으로써, 미국과의 대북 역제를 위한 공동협력에는 온도차나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도 단순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시도라고 하기에는, 상황에 맞는다고 할 수 없다. 대북 심리전 자제라든가 수백명의 이산가족 상봉에 초점을 맞추는 전술적 자충수를 마다하지 않았다. 햇볕정책 당시 무언가에 쫓기듯이 대량원조를 제공하면서도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니기만 하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외면은 치명적인 과오였다.

가장 큰 문제는 햇볕정책 당시처럼 한미 간의 동맹으로서의 신뢰관계 훼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한국이 운전석에 앉을 수 없는 것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본토를 타격할 국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폭탄이 트럼프의 손 위에서 폭발할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중간한 타협으로 넘어갈 수 없다. 건곤일척의 대결에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안전과 권위가 걸린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 조금이라도 맡길 수 있겠는가? 특히 과거 주사파 운동권인사들이 핵심부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신뢰를 줄 수 있을까?

5. 결어

- 지금의 외교 안보 국방 정책은 마라톤 같은 장기 목표보다는 100미터 앞의 단기 목표에 집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햇볕정책 당시처럼 평화라는 명분으로 연방제통일과 같은 분단상태의 지속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젊은 세대에게 적극적인 통일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 한미동맹을 빈틈없이 복원시켜야 한다. 신뢰가 없으면 큰 재앙이다.
- 절대 절명의 엄중한 상황에서 모든 사태와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이에겐 북한 급변사태도 포함된다.
-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와 향후 과제

조영기
고려대 교수

문재인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와 향후 과제

-통일·외교·국방정책을 중심으로-

조 영기 교수(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I. 문재인행정부의 통일·외교·국방 분야의 국정과제(3개전략, 16개의 과제)

전략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임기내 전환
- 국방개혁 및 국방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방위산업 육성
-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전략2: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 남북기본협정체결 및 남북관계재정립
- 북한인권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남북교류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전략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증진
-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에서

II. 취임이후 통일·외교·국방 분야 추진 경과

1. 남북관계 및 통일분야

■ 남북대화에 대한 향수

-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이후 후보시절 햇볕.포용정책 계승을 공언
- 5월10일 취임사에서 “여건이 되면 평양에 가겠다.”는 의지표명

- 대화제외에 대해 북한은 5월 14일 평북 구성 일대서 미사일 발사로 화답(?)
(미사일 발사: 2017년 총13회, 취임이후 7회, 2016년 총20회)
-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식 축사에서)
- 베를린 구상발표(7.6)
- 베를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에 평화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운전대를 잡겠다.”는 것이 요체
- 베를린 구상은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접촉을 통한 변화’에 주안
-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 간에 평화체제를 구축
- 남북적십자 회담과 군사당국자 회담 제의(7.17)
-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화제외를 모두 거부: 미사일 발사로 대응
- 8.15 경축사에서 대화제외

■ 북한 핵의 심각성에 대한 안이한 인식

-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
- 북한이 핵개발에 국력을 탕진(?)하는 이유
- “핵을 앞세운 북한이 한국을 흡수통일하는 것”, 이는 북한의 변함없는 통일전술임
- 북핵 해결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
- 중국은 주변국의 핵보유에 대한 이중적 대응으로 일관: 인도와 파키스탄

■ 한반도통일에 대한 소극적 정책으로 통일정책이 후퇴

-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언급(베를린 구상 중에서)
- 통일정책의 남북관계의 관리(분단관리정책으로 후퇴)

2. 외교분야

■ 한미정상회담(6.28~7.2)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중단된 정상외교가 한미 정상회담(6.30)으로 복원
- 공동성명(6개 분야):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 공동성명의 의의
-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방위공약과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재확인
-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천명

- 사드배치문제: 사전 의제조율을 통해 제외, 의회지도부와 간담회를 통해 의구심 해소
- 북핵 해법에 대한 한미 간 (잠복된)갈등
- 한국: '핵동결→대화→핵폐기'라는 대화를 강조한 단계적 접근
- 미국: 핵폐기를 위한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고 '제재와 압박'에 방점을 둔 접근
(만찬 직전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 --> '대화와 협력'이 아니라 '제재와 압박'에 적극 동참하라는 메시지)

■ 사드배치문제

- 사드배치는 현재 “한미동맹의 견고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역할”
- 한국의 일부세력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반미친북의 전형임, 그러나 사드배치를 물리력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비호(?)하는 것 같은 한 행태는 정부 스스로 사드배치의 시급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안보적폐(安保積弊)의 사례 중 하나임
- 취임 이후 갈지(之)자 행보는 대표적 안보적폐 사례임
- 사드배치가 충격적이다.(5.31) → 절차적 정당성 강조 → 환경영향평가 → 북한의 화성-14호 발사(7.28) → 임시배치지시(7.29) → 유엔결의 2371호 대북제재 → 임시배치 후퇴조짐
- 과연 배치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안보불감증과 동맹
- 사드배치를 전 정부의 일로 치부했다면 사드로 인한 한중갈등은 조기 해결국면 진입 (사드배치완료가 사드로 인한 한중 간의 '출구'로 작용) --> 외교능력의 무능

3. 안보국방 분야

■ 안보기구 개혁

- 국정원에 대한 개혁(?)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대공수사권 포함 수사권 이관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 이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가정보원의 자체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삭제 ▲감사원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비공개 조사 ▲ 다른 기관 예산에 포함 시킬 수 있었던 비밀활동비 삭제해 국정원비와 정보비로 편성,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 포함 ▲국정원 원장 및 차장 등 간부의 정치개입 등 부당한 지시와 불법 행위에 대해 직원들 항명권 부여 ▲ 대통령의 지시 및 정보 활동 요구 문서화 ▲국정원 원장 및 차장 등 직원들의 정치관여 금지, 직권남용 금지, 도청금지를 위반할 때 신고 및 포상 신설 조항 등을 담았다. ▲정치개입 관련 처벌조항을 상향 조정, ▲정치관여죄 위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
--

-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좌파성향의 인원으로 구성
- 국가안보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무력화시킬 우려
- 적폐청산을 가장한 정치 보복의 가능성이 우려,
- 보수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활동

Ⅲ. 평가 및 과제

■ 평가

-북한의 근원적 변화 -북한 정상화- 를 추구하기 보다는 ‘교역(접촉)을 통한 변화’에
 치중: 베를린 구상의 실현동력을 얻기 위해 노력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위한 조건
1. 북한경제의 극심한 구조적 왜곡: 국제공조
2. 외부정보유입: 북한의 정보화 민주화를 위한 필수요소
3. 종교단체 NGO의 활동
4. 경제 불평등의 극심한 왜곡

- 북미간의 대결구도가 심화되면서 남북관계도 위축
-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맹강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은 미온적
- 사드배치 지연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결여
- 방미 시 “대한미국”이라고 방명한 것은 의도인지 실수인지 불명확
- G-20 정상회의 시 독일 방문 시 윤이상 묘비에 헌수
- 북핵위협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미온적 대처로 안보불감증 증대
- 대통령의 휴가, 외교안보장관의 휴가
- 유엔결의 2371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미흡
- 종합평가:
- 정상외교 복원은 다행
- 외교·안보: 무능한가 안이한가
- 국방비증액은
- 대북정책: ‘베를린 구상’의 이행에 초점
- 국방분야: 국방비 증액은 다행, 군의 포퓰리즘은 경계, 군지휘관 인사는 우려

■ 과제

- 북한의 정상화 -개혁과 개방-을 위한 방안 마련
-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기 위한 국제공조: 정부합동의 ‘제재이행감시기구’ 조직, 이행상황의 지속적 감시·조직, 국제공조방안도 마련
-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화: 남북방송동시개방, TV 수상기 제공, 계층별 지역별 차별화

된 정보유입

- 현 시점에서 대화의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
- 북한의 추가도발은 예견된 상수: 추가도발 시 제재수위를 사전에 예고
(예: SLBM 발사: 원유수출중단, 6차 핵실험: 예방타격)
- 한미동맹의 강화되어야만 중국의 실질적 역할을 추동하는 압력기제로 작용
(미국 무역법 301조 적용, 제3국 제재(secondary boycott) 적용)

-국방개혁

- 국방R&D의 민간개방을 통한 국방연구성과가 민간부문으로 파급
(국가과학기술예산의 일정부분을 국방과학기술을 위한 분야에 투자)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군 구조개편: 무기체계 중심의 군 구조개편)

-북핵에 대비한 국방안보체계의 재편

- 북핵은 현존하는 실제적 위협: “핵을 앞세운 한국 흡수통일”
- 국방안보의 핵심요소: 자강(自強) + 동맹 + 균세
- 국방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동맹에 기반한 자강 --> 자강에 기반한 동맹
(자강: 정신적 자강 + 군사적 자강 = 핵무장(전술핵 배치)

-안보적폐 청산

- 제1의 안보적폐: 유화정책으로 김정은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행위
- 제2의 안보적폐: 유화정책으로 국민의 안보불감증을 확산시키는 행위
- 제3의 안보적폐: 친북세력의 반미활동을 방조하는 행위
- 제4의 안보적폐: 사드배치반대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위
- 제5의 안보적폐: 안보포퐁리즘에 의존해 국가 안위를 소홀히 하는 행위

MEMO



MEMO



MEMO

